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잡정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인가?

5~8면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9~10면

집값 잡겠더니
투기 촉진해 온
정부

2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3면

코로나 백신 개발
망치고 있는
자본주의 경쟁

4면

홍콩 보안법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11면

온라인 기사

• 미국과 중국은 신생전에 돌입했는가
•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정선영

석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해 4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켜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든 여러 사건들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요인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무려 52퍼센트나 올랐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15억 원으로 뛴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37년이 걸렸는데, 현재 43년으로 늘어났다.(경실련)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반지하방을 전세로 얻는데도 역대 보증금이 든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집값 인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만 평균 5억 원이 늘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처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계급적 분노

이런 행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계급적 본질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나’하는 합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책들은 솜방망이 정도만 내놔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무려 2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을 선정해 개인들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는 현금 부자들이나 기업들의 투자를 막을 수 없었다.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규제 대



청와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 지난 3년간 52퍼센트나 오른 서울 아파트 값 집 없는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상이 아닌 지역과 가격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소폭 인상에 그쳤고, 전국적으로 200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주는 막대한 세금 혜택은 유지됐다.

2017년 8월 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장은 SH나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며 제도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는 데는 소극적이었지만, 부동산 투

기를 유발할 수 있는 건설 경기 부양책들은 계속 발표했다. 올해 4~5월에도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설 승인,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발표하며 사실상 투기를 조장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24조 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정부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실시한 경기 부양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주택난 해결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사실상 부동산 거품을 키워 온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정부는 본질적으로 친기업적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빚내서 집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거품이 가라앉으며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가 되는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정부는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길을 더욱 좁힌 것이다. 이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앞으로 부채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대출 옥죄기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과 타협하는 정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최근 문재인은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라며 대책을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부동산 불안 송구”하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7월 7일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거레 절벽 없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찾으려 고심했다는데, 이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거론되는 대책들도 실행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엔 12·16 대책보다 더 강한 세금 인상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제 추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며 가격을 낮추려면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곧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

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4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지만, 역세권 건물의 용적률을 높이는 규제 완화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의 비싼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친시장적 공급 확대는 투자를 부를 뿐이다. 비싼 분양가격으로 건설 기업들만 이득을 볼 것이다. 3기 신도시, 용산 미니 신도시 등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들쭉였다.

집값을 잡고 노동자·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종부세 등 부유세를 대폭 올리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값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임기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서울시의 1인 가구 청년의 3분의 1 이상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지옥고)를 전전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게다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터무니없이 비

싸 무늬만 공공주택인 경우도 많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의 이윤 논리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우선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의 행보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적 본질을 드러낸 많은 사례 중 하나다. 노동운동은 정부와의 대화가 아니라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고, 투쟁을 강화하며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왼쪽의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김문성

7월 둘째 주 공식정치에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점이다.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덕과 재난지원금 지급 덕을 크게 봤다. 총선 압승 효과 탓에 4월 말~5월 초에만 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도 올랐었다. 워낙 높아서 5월의 하강세는 별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6월 이후 중요한 악재들을 만나 지지율이 빠르게 하강해 5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 집값 급상승과 인천공항 정규직화 문제 등이 주요인이 됐다.

6월 중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도 하락 추세에 영향을 줬다. 남북관계는 올해 들어 'K-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문재인은 남북관계를 회복하려고 미국 대선 전 북·미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7월 3일 대북 안보 라인 인사도 교체했다. 특히, 여전히 대북 채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민생당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관련 기사: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박지원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사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등과 함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에 불법 송금을 한 것이 드러나 노무현 정부 첫해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 뒤로 친노 진영은 박지원을 줄곧 경계하며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 정권 탈환을 위해 잠시 갈등을 봉합했지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갈라섰다. 당시 문재인이 민주당을 친문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박지원과 천정배 등 비문 호남계를 밀어낸 것이다.

그랬던 박지원을 요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문재인의 다급함을 보여 주는 듯하다. 이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일반적인 진보진영 지도자들에게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비핵화시킨다는 전망에 남한 정부가 기본적으로 동조하는 상황에서는 남북 화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한 달을 포함해 여러 해 동안 몇 차례 확인됐다. 친미 노선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기조는 박지원이 몸담았던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經濟新聞)은 현재 남북관계의 긴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미국 측에 제한하라”는 한국의 대북 조언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친구처럼 다가와서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에서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불만과 분노를 봉합하려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해 정부·여당의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경제 상황, 코로나 위기, 한반도 주변 정세 모두 지배계급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지배자들은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임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부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미국한테 좋은 일을 시켜준 셈이니, 북한 수뇌부가 “달나라 타령” 운운하며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할 만도 하다. 물론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진 직책이라는 점에서 박지원 임명이 주목되기도 한다.

한편, 문재인은 6월 말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경찰에서 청와대로 파견) 경력에 있는 부산 출신 김창룡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 김창룡의 청장 임기 중에 대선이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요직을 배분하며 범민주당계의 단합을 꾀하는 면도 있어 보인다.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부동산 문제가말로 최근 결정적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가 오히려 서민층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 때문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원성을 사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 규제 목적으로 (세금 부과, 임대료 규제 등)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한다

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 유인책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

이번에는, ‘투기 과열’을 막겠다며 서민층(특히, 30~40대) 대출을 규제한 것이다. 서민층은 수도권 집값(특히 아파트값)이 더 오르면 아예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다는 절박감이 크다. 공공주택 공급은 적고, 금리가 낮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고 있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력도 크다.

그러므로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보유자들로 새삼스럽게 알려진 것은 정권의 악재였다. 대통령 비서실장(노영민)이 불을 질렀다.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한다더니, 서울 반포 고가 아파트는 남기고 자기 지역구인 충북 청주의 저가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것이다(그 뒤 입장을 바꿨지만).

문재인은 7월 3일 다급하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추가 대책을 지시하고 보유세 강화 등 집 부자 규제 강화와 서민층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지시했다. 같은 날 민주당 대표 이태환도 부동산 사태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적 실패를 인정했다. 사안이 심각함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문재인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를 봐도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30대가 최근 조사에서 부정평가로 크게 돌아섰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도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오히려 부동산 폭등에 기여했었다. 당시 부동산 정책라인이 이번 정부에서도 중심에 있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경제 위기 국면에서 자산가들은 사유재산권과 이윤 보호에 사활을

건다. 용두사미가 예상되는 이유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논란에 대응하는 걸 봐도 청년들이 정부에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 그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에는 정부가 개혁 약속을 저버린 탓이 결정적으로 크다.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수십만 개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은 파산했다.

우파와 기업주들의 반대에 정부가 대체로 순응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인천공항 논란에서 청년들을 비난하며 비정규직 편을 드는 듯 품을 잡았지만, 진지한 반성이나 해법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양극화 억제

부동산 문제와 남북 문제에서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불만과 분노를 봉합하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해 정부·여당의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두 쟁점은 좌우 양극화를 촉발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반일 민족주의 정서를 슬슬 자극하는 배경이다.

물론 우파와 진보·좌파 둘 다 취약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는 억제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조선 의원 조수진이 한탄을 할 정도다. “통합당은 비대위원장 뽑는 걸로 두 달 끝났다. 현정사에 이런 정당은 처음이다.”

그런데 우파가 반사이익을 곧바로 얻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럭저럭 진보 지도자들의 협조를 구해 왼쪽의 정치적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게 적절하게 단속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익을 표현하는 정당으로서의 임무를 결정적으로 도전받지 않은 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가 좌초 위기에 몰린 것은 정부에게 악재가 될 수

도 있었다. 문재인은 포퓰리즘을 이용해 노동운동을 묶어두며 정치 안정을 꾀해 왔다. 문제는 노동운동의 대응이 변변찮다는 점이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다수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대에 직면했는데,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으로 잠정 합의안 가결을 시도하고 있다. (관련 기사 12면)

노동운동의 두 주요 정치조직인 정의당과 진보당은 잠정 합의안 찬반이라는 첨예한 쟁점에서 당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정치 운동과 경제 투쟁의 분업에 따라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 정당이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개혁주의 전략에서 비롯한 침묵일 수도 있고, 노동운동 내부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회피하려는 눈치 보기 정치에서 비롯한 침묵일 수도 있다. 아무튼 두 주요 진보정당들이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고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두 정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내부 갈등 속에서도 민주노총 중집은 예정됐던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큰 이견 없이 취소했다(서울시의 취소 권고에 응해). 사회적 대화에서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 코로나 위기, 한반도 주변 정세 모두 지배계급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지배자들은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임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부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들 민주노총 노동조합 기구들과 조직들의 통일성 보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자본주의 경쟁이 백신 개발을 망치고 있다

장호중

코로나 백신 개발에 여러 나라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빨라 백신이 개발돼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백신 개발 경쟁 때문에 방역 노력이 압도적으로 백신 개발에만 집중되고 당장 필요한 다른 방역 노력들을 뒷전으로 미루는 명분이 되고 있다. 현재 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과 영국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확진자 300만 명을 향해 내달리는 미국과 사망자수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한 영국에서는 지금 당장 비필수 부문의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폭증하는 환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 기반 설비를 확충하고 개인보호장비를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방역에 필요한 재원이 백신 개발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대로 백신만 개발되면 코로나19를 멈출 수 있는 걸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후보 백신 8개 중 4개가 중국에서 임상 시험 중이다. 그 외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두 개, 독일 바이오엔테크, 중국의 포순파마와 미국의 화이자 합작으로 연구 중인 게 하나, 영국에 본부를 둔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합작 연구가 하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 하나와 중국, 영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가장 앞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백신 개발 성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는 거의 검증되지 않고 있다.

미국 바이오엔테크 기업 모더나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백신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널리 알려졌고 주가는 치솟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실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옥스퍼드대학이 연구 중인 백신은 원숭이의 폐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원숭이 신체의 다른 부위, 예컨대 코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원숭이만큼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돼 그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백신은 현재 인체 실험 단계를 밟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패권 경쟁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너도나도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필요한 협력과 자원 배분은 가로막혀 있다

중국의 한 그룹도 초기 동물 실험에서 비슷한 보고를 한 바 있다.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이 백신들은 모두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이 백신들은 현재 모두 임상 시험 1단계(1상)에 머무르고 있다. 임상 1상은 소수의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약이나 백신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단계다. 2상은 다수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사하는 게 핵심 목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일부 백신이 이 단계에 도달해 있다.

수익성과 정치적 우위

그러나 임상 1상 시험 결과들은 거의 공개되지 않아 그 진위 여부조차 알기 어렵다. 실제 시판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감염병 백신의 경우 77퍼센트가 임상 1상을 통과하지만 33퍼센트만이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더나의 경우도 보도 자료에 공개된 데이터는 극도로 빈약해서 진실을 알기 어렵다. 모더나는 45명 중 8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전체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 의의가 빈약하다. 나머지 37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모더나는 7월 3일로 예정된 임상 3상 시험을 갑자기 연기했는데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주가 폭락을

감수하고 시험을 연기한 것을 보면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닐 듯하다.

이처럼 임상 시험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숨겨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보들이 학술지 등에 실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옥스퍼드와 중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경우도 조그마한 성과를 엄청나게 부풀리는 한편 제대로 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연구를 다 집어치워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모든 백신 개발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 각 나라들은 저마다 백신 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려 한다. 백신을 먼저 개발하는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 앞서 경제활동을 정상화할 것이다. 그 나라의 제약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은 물론이고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위상도 높일 것이다.

중국 제약 기업들에 서구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회사 롱카의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미국보다 넉 달 먼저 성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경제를 완전 개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 ‘중국인들이 백신을 만들었다, 우리는 아직’이라는 헤드라인을 떠올려 보라.”

이 치열한 국제 경쟁은 수익성 높은

백신 시장을 확보하려는 기업주들의 노력과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정부들의 경쟁에서 비롯한다. 그 결과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대응에서 백신과 함께 필요한 공공보건 강화나 개인보호장비 보급 등에는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4년 이래 서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에볼라 위기에서 보듯 개발된 백신이 있더라도 그 생산과 분배가 적절히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민간기업에 백신 개발과 생산, 분배가 내맡겨져 있는 상황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제한적 치료제로 도입된 렘데시비르도 이윤 논리의 냉혹함을 보여 주는 사례다.

원래 이 약도 에볼라 치료를 위해 개발되던 것으로 투자와 지원이 적어 최근까지도 임상 3상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제약회사와 선진국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렘데시비르는 용도를 바꿔 한편으로는 고가 가격 논란을 빚는 동시에 애초 목적이었던 에볼라에 대한 효능 검증은 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를 구하는데 쓰였어야 할 이 약은 선진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했다.(물론 아직 그 치

료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맹목적인 경쟁은 ‘백신 개발 전까지 버티기’라는 세계적 목표마저 공중분해시킬 위험을 낳고 있다.

이 기사는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458호에 실린 ‘Hyping up a vaccine’ (Lee humber)을 많이 참고해 쓴 것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미국과 중국은 신병전에 돌입했는가?

★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 공수처 설치의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없다

★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 합의안 해설 비판

★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정진희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므로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최근 <변혁정치> 108호에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계급환원론을 넘어서)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계급 환원론이어서 여성 문제를 중시하지 않고 “계급해방 이후”의 문제로 넘”긴다고 주장한다. 20세기 사회주의 운동과 러시아 혁명의 경험이 그랬다고 한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돼 있다며 “자본주의에서 작동하는 가부장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본주의 폐절 이후에도 여성해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주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환원론이 무엇인지부터 짚어 보자. 환원론은 복잡한 견해를 그 구성 요소로 단순화하면 완전히 알 수 있다는 인식방법이다.

만약 차별 문제를 착취 면에서만 이해하려 하고 소외와 가족, 재생산, 국가, 이데올로기, 의식 등의 범주들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급 환원론이라 할 수 있다. 지수에겐 미안하게도 우리는 이런 범주들을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우리는 차별 문제를 계급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우리의 방법은 환원이 아니라, 현상과 실제의 관계 문제와 관련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차별 현상들의 근저에 노동, 착취, 생산,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이 실제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차별 현상들의 형태와 성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영향 받는 방식은 직접적이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범주들을 매개로 이뤄지는 중첩적인 것이다. 이런 방법이 환원론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없다. 차라리 비판적 실재론의 일종일지언정 말이다.

흔히 그러듯 옛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로 오해한다면, 그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에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젠더를 사회적 구성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젠더에 관한 본질주의적 관점이 함축돼 있다. 또한 옛 소련과 동유럽, 중국, 쿠바, 북한 등의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은 실제로 만연했다.

그러나 소련 등 옛 동구권의 체제와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엥겔스·레닌·트로츠키 등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완전히 다르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체제와 사상은 러시아 혁명의 쇠퇴 속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촉발한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 혁명 승리 뒤 노동자 국가는 여성해방을 위해 급진적 조치들을 대거 시행했다

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소련 관료들의 이데올로기로 시작해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전통을 완전히 왜곡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차별을 계급 착취 문제로 환원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엥겔스·레닌·트로츠키와 체트킨·콜론타이 등은 모두 노동계급 여성뿐 아니라 중간계급과 지배계급 여성도 차별받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차별을 착취와 명확히 구별했다. 그러나 둘을 분리시키지는 않았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변증법이 아니라 이분법적이 되거나 절충주의가 된다.

고전적·혁명적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을 혁명 이후로 미루기는커녕 여성해방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을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로 여겼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 이전부터 여성 차별과 민족 차별에 맞서 싸우는 전통을 확립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클라라 체트킨과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등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당대의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그들은 여성 투표권 쟁취에 집중했던 당시 페미니스트들과 달리, 투표권, 동일임금, 여성의 교육권 등 노동계급 여성을 위한 더 폭넓은 쟁점들을 제기했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 여성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도록 이끌었다. 그 쟁점이 노동계급이 평의회를 설립해 권력을 장악한 러시아 혁명이었다. 혁명 직후, 여성해방을 위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급진적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관련 본지 기사: 김은영, ‘러시아 혁명이 보

여 준 여성해방의 가능성)

변혁당원 지수는 마르크스주의가 자유주의 페미니즘보다 우월했고 러시아 혁명이 초기에 여성해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이 결국 여성해방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이라며 이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계급 환원론으로 빠졌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을 이끈 세력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인 레닌과 트로츠키가 지도한 볼셰비키였고, 혁명 초기의 성과는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다. 그들은 혁명 이전부터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해 온 전통을 갖고 있었고, 혁명 뒤에는 여성해방을 위한 노력을 각별히 강화하고자 제노텔(여성부)을 설립했다.

러시아 혁명

초대 의장인 이네싸 아르망이 사망한 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제노텔 활동을 이끌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콜론타이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며 그의 ‘페미니즘’ 때문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남성 당원들이 그의 활동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변혁정치> 104호에 선지현 씨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에 대해 쓴 글도 콜론타이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콜론타이 대 남성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구도는 역사적 진실에 기초를 둔 게 아니라, 혁명적 조직을 불신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편견(혁명적 조직 속에서도 여성은 억압받을 뿐이라는)이 투영된 것일 뿐이다. 콜론타이는 페미니스트였기는커녕 오히

려 당대의 페미니스트들과 격렬한 논쟁을 주도했다. 콜론타이는 1909년 <여성 문제의 사회적 토대>에서 계급을 초월해 여성을 단결시키려는 페미니스트 전략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 제노텔 설립 제안을 적극 지지한 것은 바로 레닌이었고, 제노텔 활동은 레닌과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 당 핵심 지도부의 지지에 의해 이뤄졌다.(콜론타이, 체트킨, 레닌, 트로츠키가 당대 여성해방에 관해 쓰거나 연설한 내용을 엮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책갈피, 2015]을 참고하십시오.)

레닌은 러시아 혁명 후 노동자 국가가 이룬 성과를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여성 지위와 비교하며 자랑스러워했다. 동시에 그는 여전히 여성이 “가정의 노예”라며 여성해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볼셰비키는 혁명 과정에 여성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고 양육과 가사의 사회화 등을 추진하며 여성해방을 실질화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보면, 러시아 혁명이 결국 여성해방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이유를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 찾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 러시아 혁명이 어떤 쇠퇴를 겪어야 했는지를 유물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수의 글은 1920년대 러시아 상황에 대한 유물론적인 분석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초기의 성과를 넘어 여성해방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일소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고만 주장할 뿐이다.

이런 주장은 러시아 혁명이 1920년대에 서구 혁명의 패배와 국내의 내전으로 엄청난 경제적·정치적 난관에 봉착했음을 무시하는 이데올로기주의적인 평가다. 지수의 글에서는 또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러시아 혁명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러시아 혁명이 승리한 다음해부터 시작된 내전과 14개국의 개입 때문에, 갓 태어난 노동자 국가는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특히, 경제와 산업이 붕괴돼 엄청난 사회적·정치적 위기가 초래됐고, 유일한 구원자인 유럽 혁명, 특히 독일 혁명의 패배(1923년 10월)로 러시아 혁명은 완전히 고립됐다.

내전을 치르면서 선진 노동자의 대다수가 사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온갖 좌절과 위기로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 스탈린이 지도하는 관료의 부상과 공산당·국가의 관료화는 이런 맥락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이 와중에 득세한 관료층은 혁명과 국제주의의 이상을 포기하며 그 나름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의 수장 스탈린은 레닌 사후에 트로츠키가 이끈 당내의 좌파적 반대자들과 벌여온 투쟁에서 승리하고 1920년대 말 강제적 집단농장화와 억압적 공업화를 추진하며 관료적 지령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낙태 불법화, 동성애 처벌 부활, 소수민족 억압, 엄청난 노동조건 악화 등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러시아 혁명이 파괴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최일봉의 <러시아 혁명: 희망과 좌절>[책갈피, 2017]을 보시오.)

▶ 6면으로 이어짐

▶ 5면에서 이어짐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에 대한 오해

페미니스트들의 글을 읽어 보면, 마르크스주의를 (스탈린주의에 의한 왜곡이 아닌,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인데도) 계급 환원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은 여성 차별 등 여러 형태의 차별을 노동계급이 일터에서 겪는 착취 문제로 환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이 계급사회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자본주의 사회를 폐지할 잠재력이 있는 사회세력이 무엇(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은 베버 등 사회학의 계급 개념처럼 사회에서 개인들의 서열적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사회의 생산 과정 속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를 뜻한다.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은 이윤(착취)이고 이윤의 원천을 둘러싼 착취 관계가 계급 관계이며 바로 이런 계급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분단선이다. (자세한 설명은 본지 144호 조셉 추바라의 기사 ‘계급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의 원인을 남성의 본성이나 심리로 돌리는 페미니즘의 흔한 접근법과 달리, 여성 차별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 위치 지으며 착취와 차별의 구조적 연관을 밝힌다.

성, 성적 지향, 인종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계급을 초월해 일어나지만, 자본주의 착취 관계와 무관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여성 차별을 구조화하는 핵심 제도인 가족제도는 자본주의 생산에 중요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제도다. 생산이 사회적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노동력 재생산이 개별 가정에 맡겨져 이뤄지는 것은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 생산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차별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구조와 작동 방식에서 비롯한다. 지배계급은 차별받는 계급(계급 차별도 차별이!)인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착취를 강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체계적으로 조장한다. 물질적 조건 변화와 집단적 투쟁을 통한 차별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자본주의 하에서는 일시적이게 되는 이유다.

계급이 사회의 핵심 분단선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사회관은 차별받는 집단 내에서도 차별 해결을 위해 취하는 방법과 태도가 같지 않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성이 계급을 초월해 차별받지만 계급의 차이 때문에 차별의 정도와 경험이 동일하지 않고, 차별에 맞서는 태도도 이해관계와 저항 방식이 같지 않다.

지배계급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차별에 반대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저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중간계급 여성은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하려 하고, 지배계급 여성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평등을 추구한다. 자본가나 같은 계층의 국가관료인 여성들은 그들의 남성특처럼 노동계급 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에서 이득을



1921년 페트로그라드에서 열린 동성 결혼식에 참가한 하객들. 러시아 혁명 뒤 노동자 국가는 낙태와 동성애도 합법화해 성적 자유를 확대했다

얻는다.

여성 차별이 자본주의 체제에 그 동인을 두고 있기에 이윤 생산(그리고 자본 축적)에 타격을 가하고 마침내 자본주의 사회를 폐지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힘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을 보편적 계급이라고 불렀던 이유다. 노동계급이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혁명을 통해 착취와 차별을 모두 없앨 잠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혁명의 현실성”(루카치)은 러시아 혁명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혁명으로 수립된 노동자 국가는 여성의 완전한 법률적 평등을 보장하고 이혼 자유화, 낙태 합법화, 가사의 사회화 등을 시도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합법화했다. 또, 러시아인들의 차별을 받아 온 비러시아 소수 민족들의 자결권도 보장했다. 혁명 정부는 소수민족 거주 지역 ‘자치권’을 갖고, 소수 언어가 ‘사회·정치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평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성해방과 계급투쟁

계급투쟁이 고양되면 임금 등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뿐 아니라 차별에 맞선 투쟁도 활발해진다. 영국에서 낙태 합법화(1967년)에 반대한 우파의 공세를 좌절시킨 것은 노동계급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대규모 낙태권 시위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기층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함께 노조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토론과 논쟁을 이끌고 거리 시위를 조직하는 등 활동을 하며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대중적 낙태권 운동을 건설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이 언제나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투쟁의 수준이나 투쟁에 참가하는 노동계급 의식은 불균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잠재력과 현재 상태에는 대개 간극이 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점을 늘 인식해 왔다.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차별과 이간질을 통해 노동계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주요 수단의 하나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차별에 맞서 적극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레닌은 사회주의자들이 “대중의 호

민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그는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이 몰입하는 협소한 쟁점들에만 시야를 가둔 채 정치적으로는 대세를 추수하는 경향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그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전 계급적으로 확대하고 혁명에 대비하는 혁명적 조직을 건설하고자 애썼다. 여러 해 동안 혁명적 조직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며 당원들을 훈련시킨 덕분에 레닌의 볼셰비키는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조직을 건설하면서 노동계급이 겪는 착취와 차별 모두에 맞서 노동계급이 단결된 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물론 노동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별에 저항할 때도 노동계급 운동이 관여하도록 애써야 한다.)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는 지배자들의 주장과 차별 조직에 일관되게 맞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운동 내 논쟁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과 이를 위한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통해 노동계급은 자신감과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성별 관계를 대립적으로 여긴다면, 차별에 맞서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 합법화(1967년)에 반대한 우파의 공세를 좌절시킨 것은 노동계급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대규모 낙태권 시위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기층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함께 노조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토론과 논쟁을 이끌고 거리 시위를 조직하는 등 활동을 하며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대중적 낙태권 운동을 건설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이 언제나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투쟁의 수준이나 투쟁에 참가하는 노동계급 의식은 불균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잠재력과 현재 상태에는 대개 간극이 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점을 늘 인식해 왔다.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차별과 이간질을 통해 노동계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주요 수단의 하나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차별에 맞서 적극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레닌은 사회주의자들이 “대중의 호



러시아 혁명의 쇄퇴 속에서 부상한 관료들은 1920년대 말 이후 소련의 지배계급이 됐다

옛 소련 사회의 성격

계급해방이 된다고 해서 여성해방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에는 옛 소련 사회를 계급 없는 사회주의 사회로 오해하는 견해가 담겨 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계급이 없어졌지만 여성은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수의 글도 “자본주의 폐절 이후에도 소비에트는 왜 여성해방을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물음을 던지며 옛 소련에서 계급이 사라졌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옛 소련은 계급 없는 사회주의 사회가 결코 아니었다.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와 공산당 관료들의 미사여구와는 달리 소련에서 계급이나 계급 적대가 사라진 적은 없었다. 사유재산은 없었지만 당·국가 관료는 노동자와 농민이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다. 노동자와 농민 대중이 만

족이, 고전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입장을 취했다. 페미니즘은 “계급해방이 된다고 해서 여성해방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가부장제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지수 도 같은 주장을 편다. “계급해방이 먼저”라며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비판하려는 취지는 옳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고전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입장을 취했다. 페미니즘은 “계급해방이 된다고 해서 여성해방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가부장제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지수 도 같은 주장을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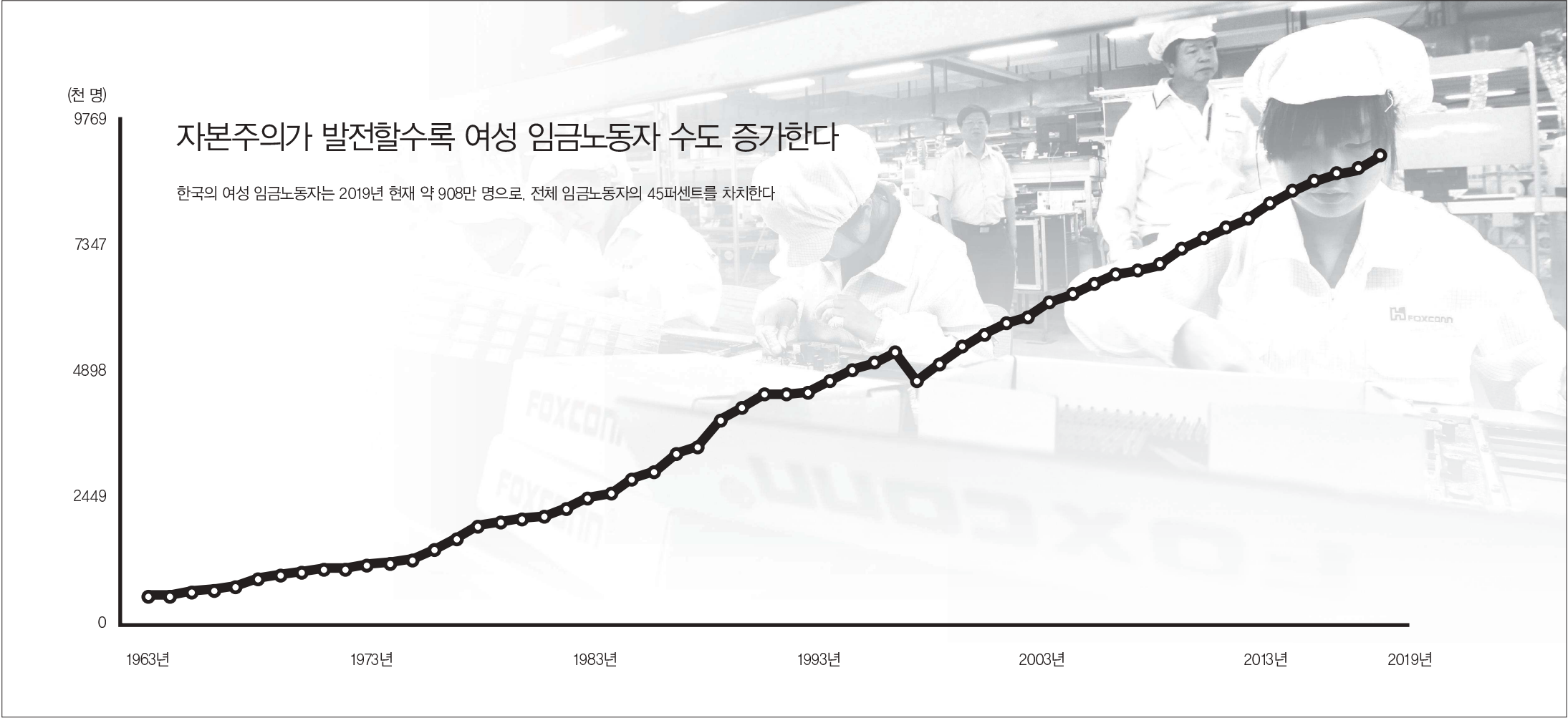
1960년대와 1970년대 소련의 소득 불평등은 서구와 비슷했다. 최상층 10퍼센트 가구가 차지한 소득(24.1퍼센트)은 최하층 10퍼센트 가구 소득(3.4퍼센트)의 일곱 배가 넘었다. 이런 격차는 미국과 스웨덴, 이탈리아보다는 적은 것이었지만, 일본과 스웨덴보다는 컸다.

▶ 7면으로 이어짐

스탈린이 당 내의 좌파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고 승리한 1920년대 말 이후 소련에서는 파업이 금지되고 파업 주도자들은 사형 선고로 받았다. 노동계급이 생산과 사회를 통제하기는커녕 노동조합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옛 동구권의 사회 체제가 서구 시장 자본주의와 똑같이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한다는 점이 가려진다.

옛 소련의 관료들은 1920년대 말 이후 지배계급(착취자)이 됐고, 노동계급은 관료들이 통제하는 국가기구를 통해 집합적으로 착취당했다. 유대계 팔레스타인 출신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이가렐 글록스타인(토니 클리프)은 1947년에 출판한 저작 <소련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이 점을 체계적으로 실증·논증했다. (자세한 설명은 최일봉, 앞의 책에 실린 논문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국가자본주의론의 관점’을 보시오.)

국가자본주의론은 ‘사회주의’로 잘못 알려진 나라들의 본질과 그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 차별이 광범하고 체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옛 소련 사회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사회주의 사회가 돼도 여성의 처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비판적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



▶ 6면에서 이어짐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

1970년대에 서구에서 부상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소련 등 당시 동구권 사회를 사회주의로 봤기에, 마르크스주의를 백역하며 인류 역사 전체를 남성 여성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가부장제 이론을 수용했다.

가부장제 이론은 남성을 여성 차별의 원인으로 꼽으며 여성 차별을 인류 역사 내 존재한 보편적 특징으로 취급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이론을 수용하면서 계급 착취와 여성 차별을 별개로 취급한다. 따라서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급투쟁과 분리된다. (가부장제 이론의 여러 형태와 그에 대한 상세한 논박은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린지 저먼이 쓴 논문 ‘가부장제 이론 비판’(마르크스21) 17호)을 참고하시오.)

가부장제 이론과 사회주의 사상의 결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착취는 자본주의의 산물, 여성 차별은 (이와 별개로 작동하는) 가부장제의 산물’로 보는 이중 체계론의 모습을 띠었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돼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도 있었다.

지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돼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변혁정치> 109호에 실린 선지현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사회주의 페미니즘, 가부장제와 융합한 자본주의에 맞선 여성해방의 열쇠 찾기’도 그런 입장이다.

지수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초역사적 가부장제 개념과 거리를 두면서 ‘역사적 가부장제’ 개념을 사용한다. “역사 속에서 가부장제는 지배적인 생산양식

에 조응해 여성억압을 강화해 왔다”며 가부장제가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를 거치며 사회경제 구조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한다.

초역사적 가부장제 개념과 급진적 페미니즘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역사적 가부장제’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가부장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이 개념이 “현존하는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를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지수의 글에서도 가부장제는 특정 형태의 가족제도로 한정해 쓰이지 않고 사회구조의 성격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개념(남성 권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지수는 가부장제가 단지 이데올로기만 아니고 사회구조라고 한다. 하지만 가부장제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는지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의 핵심 분단선이 계급에 있음을 부정하는 가부장제 개념을 계급사회인 자본주의의 생산양식 개념과 결합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된다. 이런 접근법은 생산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사회를 하나의 전체로서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사회 내에 여러 사회구조들이 나란히 존재한다고 보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사회관과 유사하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유기적 결합” 또는 “융합”을 얘기해도 그걸 ‘가부장제’ 개념을 사용한다. “역사 속에서 가부장제는 지배적인 생산양식

가 자본주의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수는 가부장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해 준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지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을 이렇게 표현한다. “여성의 부활노동(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고, 출산과 돌봄을 개인의 책임 — 특히 이 개념이 “현존하는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를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지수의 글에서도 가부장제는 특정 형태의 가족제도로 한정해 쓰이지 않고 사회구조의 성격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개념(남성 권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가족 내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과 가족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유지에 중요하다고 해서, 가족제도가 자본주의 체제를 움직이는 동력인 것은 아니다. 가족제도를 자본주의의 동력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이전 계급사회와 구별되는 엄청난 역동성(사회 생산력의 질적인 급성장)을 보이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원동력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임금노동의 착취와 자본 축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생산 과정에서 자기 임금 몫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 잉여 가치가 이윤의 원천이다.

여성의 부활(무보수) 노동이 저임금 구조 유지의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전업부부가 줄

고 여성 임금노동자가 대거 늘어난 역사적 경험과 부합하지 않는다.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에서 여성의 대다수는 오늘날 임금노동자가 됐다.

1970년대에 하디 하트만 등 많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가들과 남성 노동자들이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며 여성을 집안에 묶어두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고용은 호황기의 일시적 현상일 뿐이고, 경기후퇴하면 여성은 다시 집안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여성 고용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도 일시적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증가해 왔다. 임금노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규모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여성이 생애에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기간도 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이전 계급사회와 달리 가족 단위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제도를 이전 계급사회의 가족제도와 똑같이 ‘가부장제’라고 부르는 것은 변화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노동계급 가족은 지배계급의 가족과 별로 공통점이 없는 것은 물론, 자본주의 이전 피차별 계급들의 가족(생산이 가족 단위로 이뤄지던 농민이나 장인의 가족)과도 다르다.

가족제도가 자본주의 생산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자본주의 생산의 변화에 따라 가족도 변화해 왔다. 자본주의 생산에 필요한 일들 때문에 여성 다수가 임금노동자가 됐고, 여성의 임금노동 참가가 증대하면서 출산율 하락, 가족 규모 축소, 독신이혼·혼외출산 증가 등 성 관념도 크

게 바뀌었다. 노동력 재생산 제도로서 가족의 핵심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족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사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성별 권력관계(가부장제)의 작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성별 환원론이라고 할 만하다. 가족제도가 여성의 임금노동 참가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시간제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에는 여성이 가족 내에서 양육과 돌봄노동을 주로 한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지만, 여성들이 모두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의 시간제 노동 비중이 높은 것이 자본주의 사회 모든 나라의 특징도 아니다. 경제의 상태와, 자본가들과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에 따라 나라별로 여성 고용의 형태에 차이가 있다.

생산의 동학을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않으면 착취는 계급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덕적 비판의 용어가 되기 쉽다. <변혁정치> 109호 선지현의 글에서도 착취와 수탈의 가족과 별로 공통점이 없는 것은 물론, 자본주의 이전 피차별 계급들의 가족(생산이 가족 단위로 이뤄지던 농민이나 장인의 가족)과도 다르다. 가족제도가 자본주의 생산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자본주의 생산의 변화에 따라 가족도 변화해 왔다. 자본주의 생산에 필요한 일들 때문에 여성 다수가 임금노동자가 됐고, 여성의 임금노동 참가가 증대하면서 출산율 하락, 가족 규모 축소, 독신이혼·혼외출산 증가 등 성 관념도 크

▶ 8면으로 이어짐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그림자처럼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관을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

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미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사진 출처: 서비스연맹

성별이 아니라 계급이 핵심 분단선. 홈플러스 사장 임일순(오른쪽)의 이윤은 홈플러스 여성 노동자들(왼쪽)의 노동을 착취하는 데에서 나온다

▶ 7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도덕가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도 잉여 가치를 합법적으로 수취하는 착취와, 법률은 물론 도덕가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혹사 행위를 구별하지 않는 용어법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마르크스주의의 착취 개념은 매우 열악한 비인간적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을 주며 일 시키는 것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착취 개념은 지위와 보수가 밀바닥인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에서 겪는 고통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착취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사실상 노동계급에 의존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이 여성해방에 주는 함의는 여성이 단지 사회의 피해자인 것만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 힘을 합해 착취와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존 질서를 전복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벌이는 투쟁과 조직화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목하며 투쟁을 발전시키려 노력해 온 이유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을 가부장제의 작동으로 설명하는 주장은 노동계급 남성을 적으로 돌리기 쉽다. 하이다 하트만은 여성을 가정 내에 묶어두려는 남성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공모”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제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겉보기에는 유물론적인 설명처럼 보였던 하트만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이론이 결국 급진 페미니즘처럼 남성의 음모로 가부장제의 존속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자본가들과 남성 노동자들의 갈등과 대립을 간단히 무시하며 남성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취급한다. 그리하여 가부장제 이론을 수용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암묵적으로 남성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며 흔히 급진적 페미니즘의 분열주의를 노동자 운동 내로 들여오는 구실을 했다. 혁명적 좌파를 성차별주의자로 매도하는 일도 적잖이 일어났다.

분열주의

그간 <변혁정치>에 실린 여성 차별 관련 글들의 대부분은 성별 이분법적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엔지오 여성단체들이 혁명적 좌파는 배척하면서 차별의 주범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는 옹호하는 중간계급적 모습을 취했지만, <변혁정치>에서 이를 비판하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간계

급적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운동을 온건하고 협소하며 배타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왔는데, 그들의 주도력에 도전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사상을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 수용해 분열주의적 방침을 노동운동 내에 확산시키는 구실을 해 왔다. 차별 문제를 노동계급의 처지에서 접근하기보다 중간계급적 페미니스트들과의 동맹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급진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사상을 절충하는 것도 그 일부다.

그러나 노동계급 여성들의 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거하려면, 급진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사상을 절충해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을 계급투쟁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지위 개선을 꾀하는 중간계급적 페미니스트들은 계급투쟁을 당연히 싫어하지만, 노동계급 여성의 해방은 계급투쟁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 착취와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도 가로막는 가부장제 이론을 받아들이기보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그 혁명적 사회주의 실천의 역사적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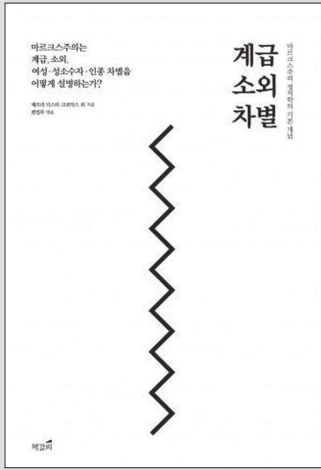
추천 도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클라라 체트킨, 블라디미르 레닌, 레온 트로츠키 지음, 정진희 엮음, 책갈피, 272쪽, 13,000원



계급, 소외, 차별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 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 외 지음, 편집부 엮음, 책갈피, 344쪽, 15,000원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주디스 오어 지음, 이창원 옮김, 책갈피, 440쪽, 16,000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기사는 7월 2일 발표한 온라인 기사를 지면용으로 축약한 것이다. 원문과 관련 토론회 영상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장호중

기본소득이 공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계기였다.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일 덕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종인 등 우파 정당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기본소득 논의는 몇 달 사이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기본소득당(옛 사회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몇 년 동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왔다.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국제적으로는 2008년 경제 공황으로 실업과 긴축재정이 확산되자 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 같은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4차산업혁명론의 영향으로 커져 온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적 안을 들여다보면 기본소득제의 실제 효과가 모순적일 것임을 알 수 있다

것도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좌파적’ 기본소득(특별한 언급 없이 기본소득을 말할 때는 좌파 측의 기본소득을 가리킨다)은 긴축재정 등 신자유주의가 낳은 패배의 대안으로 등장했다.(우파 측 기본소득의 기원은 대

체로 밀턴 프리드먼으로 여겨진다. 그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1962년 ‘음의 소득세’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적부조를 모두 폐지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서구에서는 장기 호황 덕분에 복지가 확대됐다.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낸 세금과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비교적 후한 복지가 제공됐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장기 호황이 끝났고 기업들과 정부들은

수익성을 만회하려고 노동자들이 호황기에 쟁취한 것들을 도로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급여는 갈수록 심사가 까다워지고 그 액수도 줄이는 등 저질 일자리로 내몰기 위한 괴롭힘이 심해졌다.

기본소득론자들은 불안정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고용구조가 질적으로 변한 상황에서는 기존 복지제도가 더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는커녕 늘어날 것이므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거주자 개인에게, 유급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개인의 다른 수입원과 독립적으로), 가정이라는 영역 내의 동거 형태와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주어진다.”(다니엘 라벤토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이 단지 실업과 저임금의 대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실질적 자유란 ‘억지로 일하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단서를 붙이는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국내의 기본소득안들

현재 국내에서 제안된 기본소득안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이다. 이 지사는 일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을 ‘중기적’ 계획으로 제안한다.

이재명 지사의 안은 액수가 적어도 너무 적다. 매달 8만 3000원가량의 돈으로는 “인간적 삶을 보장”받지도, “불평등을 완화”하지도 못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배당이 이 정도 액수인데, 2018년 알바몬의 조사에서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51만 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인 보너스 개념”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기본소득 전도사라고 불리는 이재명 지사가 이처럼 인색한 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조세 저항을 의식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 정도 액수로는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목표에 다가설 수 없다. 재난지원금처럼 소득 절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잠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거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자본가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누더기가 된 종부세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둘째, 기본소득당의 안을 살펴보자. 기본소득당은 매달 60만 원 지급을 말한다. 기본소득당의 안은 현재 국내에서 제시된 안들 중에 기본소득 액수가 가장 크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의 취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60만 원은 지속적으로 생계를 꾸리기에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개인은 월 154만 원, 부부는 월 243만 원이 필요하다.

60만 원

기본소득당의 재원 마련 방안에는 국토보유세 같은 부유세뿐 아니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15퍼센트를 사회세로 추가 징수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월소득 400만 원이 넘으면, 받는 돈(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더 많다.

그러나 정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처지에서는 나이지는 게 거의 없다.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사회부조 제도들을 통폐합하기 때문이다.

또, 기본소득당은 근로소득에는 15퍼센트의 세율을 추가하면서, 법인세는 현재 세수의 15퍼센트만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한다. 기업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92조 원

에 이르는 국토보유세를 거두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업주 등 부자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가해 당선된 용혜인 의원의 행보에 비춰 보면 민주당과 타협하기 위해 기본소득 액수가 낮아질 개연성도 크다.

셋째, ‘랩2050’의 안이 있다. 이 연구소의 이원재 대표는 〈한겨레〉신문 기자와 한겨레경제연구소를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미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내기도 했다.

랩2050의 안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고 추가 세원을 만들지는 않는다. 2021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8년 50~65만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소득 47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아래층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랩2050의 안은 기업주 등 부자들에게 추가 증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온건한 안이다. 오히려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들의 부담을 대폭 늘려, 저소득 노동자와 청년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안이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해 현재 지급되는 수당을 상당히 많이 삭감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복지, 그리고 기본소득의 모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소득은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제안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그동안 부족하게나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기본소득안들에서 보듯, 오히려 이들은 ‘특권층’으로 간주돼 증세의 주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기본소득론자들 중에는 ‘고용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해, 오늘날처럼 실업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일종의 ‘독점’이고 따라서 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기본소득의 핵심 타깃층은 그동안

☞ 용어설명

사회보험

수급자의 기여금(보험료)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해당된다.

공적부조(사회부조)

조세를 기반으로, 소득이 없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기초생활보호(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해당된다.

복지 급여에서 배제돼 온 사람들, 즉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없는 것으로부터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 복지제도가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 침체기에 복지 비용을 삭감하려는 지배자들의 공격은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됐던 것이 아니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에게 더는 이윤을 가져다줄 수 없는 사람들의 복지를 삭감하는 데에서는 더욱 가차 없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대표적 희생자들이었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이 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영국의 ‘예술, 제조 및 상업 장려 협회’(RSA)는 2015년 스코틀랜드 4개 지자체가 실시하려던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소득 10분위 중 최하층인 1~3분위에서 소득이 20퍼센트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애인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곳도 있었다.

국내에서 제안된 기본소득안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공적부조들은 도입된

▶ 10면으로 이어짐



기본소득이 사회 취약계층의 처지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 9면에서 이어짐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실질적인 생계보장 기능을 하려면 그 액수를 훨씬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안들에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열악한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장차 공공서비스를 더욱 약화시키거나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본소득으로 민간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우파적 기본소득론자들이 고려하는 안이기도 하다(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물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2016년 7월 9일 서울 총회에서 이런 진술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사회 서비스들과 수급권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더 나아가 일부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소득론자들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만 원 포인트로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기본소득 도입이 저소득층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우선, 일부 우파도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기본소득이든 기존 사회수당이든 결국 자본주의적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성과 이윤 논리를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이윤의 원천인 착취를 둘러싼 기존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착취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 임무로 삼는다.

모든 국가가 이 일에 얼마나 충실한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서로 앞다퉈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덕분에 지금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되고 있다.)

흔히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알려진 전후 장기 호황기의 유럽 복지국가들조차 복지 지출에 사용된 재원을 대부분 법인세 등 기업주들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마련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계급 세력 균형이나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도입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그 개선을 막는 수단이 될 공산이 크다.

기본소득 액수 – 이상과 현실

가이 스탠딩(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본소득론 주창자)이나 급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등은 기본소득을 통해 서민층과 빈곤층 사람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거부’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결과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노동시장 바깥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선택지(자유)가 마련된다고 보는 듯하다.

기본소득 액수가 얼마쯤 돼야 그 기본 취지를 충족할 수 있을까? ‘충분한’ 액수가 얼마일지는 여전히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 기본소

득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대개 최저생계비를 ‘기본’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굶어 죽지는 않을 지언정 저질 일자리를 거부할 만한 액수는 되지 못한다.

노동 거부

사실 기본소득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잡자는 제안은 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당혹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저질 일자리를 거부할 ‘자유’를 일부에게 부여해 왔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이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지원하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을 거부할 ‘자유’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 거부는 공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노동 거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기본소득의 효과를 과장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매우 중요한 다른 것들(가령 고용 안정, 임금 등 노동조건 방어, 기존 복지 방어 또는 개선 등)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계급 투쟁으로부터의 탈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일자리와 복지를 지키기 위해 저항해 왔다. 물론 저항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개혁주의 정당과 개혁주의 노조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곳에서는 노동자들의 잠재력이 자기제한적으로 사용돼, 대중의 조건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투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투쟁들 중 일부는 저항이 가능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저항한다면 어느 정도 지켜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류세 인상에 맞선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의 승리가 그 최근 사례다.

당장 괜찮은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런 저항은 필수적이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된 데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사상 초유의 충격을 가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지배자들은 더한층의 공세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투쟁을 회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유감스럽게도 기본소득론은 (원래 의도가 무엇이든) 그런 구실을 할 위험이 크다.

특히, 불안정 노동이 크게 늘어 노동시장 구조(와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변했다는 그들의 주장에는 약점이 많다. 먼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 ‘프레카리아트’ 개념으로 유명한 가이 스탠딩은 2011년에 쓴 책에서 “대다수 나라에서 지난 30년 동안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통계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OECD 통계는 그렇지 않다.

한국처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막 진입한 나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비중이 계

속 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불안정 노동’ 집단도 그 내부가 매우 이질적이다.

각종 사회보험 가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물론 더 확대돼야 한다.) 비정규직만 놓고 봐도 그렇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996년 433만 1000명에서 2019년 1386만 4000명으로 늘었다.(199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한 해가 없다.)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도 2008~2018년에 73.7퍼센트에서 85.1퍼센트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가입도 53.6퍼센트에서 63.1퍼센트로 늘었다. 전년 대비 감소한 때는 2015년 한 해뿐으로 그 폭도 1.1퍼센트포인트였다(61.0→59.9).

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에 대한 지나친 과장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조점은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성은 특정 유형(형태)의 자본주의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도 사용자에 맞서 싸울 힘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강조하려다 노동계급이 신자유주의에 맞설 힘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김하영,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책갈피)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이 저항해 봐야 쓸모없다는 사상을 퍼뜨린다. 그것의 최신 버전인 4차산업혁명론은 고용 구조가 변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모두 기술 발전에 따른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소득론자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일부는 이런 생각을 발전시켜 ‘노동 없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까지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감소나 고용 구조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부질없다고 여긴다. 그것이 기술 발전이 낳은 불가피한 변화임을 강조하다 보니 그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조건과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기술 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시도인 것처럼 암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멀리 나아간 인사는 급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일 것이다. 그는 오늘날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임금 노동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창출된 가치라고 주장한다.

크게 잘못된 주장이다. 코로나19 발병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즉각 생산이 대거 감소하고 경제가 크게 수축됐다. 또,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구글은 2018년 수익의 85퍼센트를 광고에서 얻었다. 또 다른 데이터 공룡 기업인 페이스북도 2018년 수익의 98.5퍼센트를 광고에서 얻었다.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광고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한 노동자들,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 장비를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이윤의 원천인 것이다.

급민 이사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저항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무력감을 심어 줌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킨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오늘날 자본이 떠는 임금 노동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노동자들에게 집에 가서 기본소득이나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 – 도피 아닌 도전이 요구된다

노동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가정은 불안정 고용과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 고용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고, 또 일부는 싸우

고 있다.

기본소득은 세계적 경제 침체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 원인인 지배자들의 공격에서 눈을 돌리고, 맞서 싸우지 않으려 한다. 기본소득은 계급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다. 현 상황에 도전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적응하라고 한

다. 기본소득이 노동계급에게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보장, 임금 인상, 사회 보장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경제적·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실업급여, 충분한 연금과 아동수당,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을 요구해야 한다.

보안법 이후, 홍콩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듣는다

7월 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다. 그날 홍콩 현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령(가운데 사진)에게 현 상황과 운동의 과제를 물었다. 람치령은 홍콩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이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넣은 것이다.

결국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최근에 드러난 것은 홍콩 보안법이 대단히 가혹하고, 소위 '국가전복' 행위가 매우 많은 활동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개적으로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홍콩 정부나 중국공산당 타도 같은 구호를 내거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정치 세력과 공모하는 것을 금하는데, 그 '공모'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또, 경찰은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벌이고,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학교와 도서관들은 홍콩 독립이나 단호한 저항을 지지하는 책을 치우기 시작했고, 소위 '애국적 이념'을 교육에 도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세뇌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홍콩 사람들의 기본권과 자유, 홍콩이 누리던 자치를 심각하게 제약합니다. 사회운동, 민주주의 운동이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보안법이 발효되자마자 시위가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위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정부가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행진을 불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송환법에 반대하며 홍콩중문대와 홍콩이공대학교(홍콩폴리텍대학교)를 점거했던 시위대가 경찰에 진압된 이래, 대중 시위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대중 시위는 하강 곡면으로 갔고, 상승 곡면은 더더욱 아니었죠.

7월 1일 시위 참가자들은 주로 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의가 드높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조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력 균형이 불리한 탓에 보안법 통과를 저지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첨예해진 미·중 갈등이 홍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미·중 간 긴장 고조가 홍콩 보안법 통과와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대중운동을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색깔 혁명'으로 봅니다. 내심 그런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공산당이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보안법 발효를 강행한 것입니다.

사실,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홍콩에서도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 비교적 완화됩니다. 반면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 탄압이 심해집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대중이



“5대 요구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보안법 발효 후에도 수천 명이 항의에 나섰다



민주주의와 자치를 위해 투쟁하는 근본적 이유가 홍콩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외세 탓을 하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이 홍콩 사람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개입 호소”는 둘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와 그의 신념을 추앙한 다며 미국의 개입을 호소하는 축이고, 다른 축은 미국 시민들에게 호소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 정부에게 무역과 민주주의를 우선시해 중국과 맞서도록 촉구하게 한다는 뜻으로 “미국의 개입”을 말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둘 모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중국공산당을 공격하는 빌미로 이용할 뿐입니다. 트럼프와 서방 제국주의는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난해만 해도 홍콩 대중 운동을 비난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무역 문제에서 더 양보하면 미국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난을 줄일 것입니다.

[친서방] 극우 세력들은 미국 정부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서구 열강이 개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조류가 우려했던 저항 운동 안에서, 특히 전투적 청년들 사이에서 점점 세를 넓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심중팔구 홍콩을 지정

학적 아귀다툼의 장기작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 항쟁이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홍콩 민주주의 운동에 매우 불리합니다. 계획된 파업과 시위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홍콩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두 세대에 걸쳐 자유를 누려 왔기 때문에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후 대중 저항은 다시 분출할 겁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의 민주주의 운동과 노동자 운동을 고취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중국 남부 대도시 중 하나인 홍콩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홍콩은 비교적 자유롭고, 홍콩의 몇몇 노동운동 조직과 시민단체들은 중국 본토의 사회 운동을 측면 지원해 왔습니다. 1949년에 국민당과 스탈린주의 중국공산당에 모두 반대하는 많은 좌파 인사들이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도피했는데, 홍콩 청년들이 그 영향 속에 급진화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중국 본토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마오쩌둥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됐죠.

홍콩 보안법 반대 투쟁은 중국의 관료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의 일부입니다. 만국의 민중, 특히 중국 본토의 민중을 동맹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콩의 노동자 대중은 스스로 조직해야 하고 중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쟁, 운동과 단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 전역에서 정치적 자유를 결국 쟁취할 수 있고,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원웅 / 번역 김준호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릿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2017년 3월 1일에 출간된 조현옥 시인의 시집이다.

조현옥 시인은 196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는 광주에 살았고 28년 전 등단한 이후 일곱 권의 시집을 내고 여러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온 진보 시인이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외 25편의 시를 썼다가 부당하게도 국

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았고, 2014년 6월에는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에 동참했다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2015년 7월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시집 《4월의 비가》를, 2017년 4월에는 광주 항쟁의 진실과 시대적 과제를 담은 시집 《오월 어머니의 눈물》을 출간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뜨겁게 벌어지던 시기에 나왔다. 박근혜가 일본 아베 총리와 맺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폐기는 촛불 운동의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시인이 느껴 온 충격과 슬픔, 분노를 절절하고 호소력 짙은 언어로 풀어낸다. 시인은 자신이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접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 피해자의 시점이 되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를 느끼는 활동가가 되기도 한다.

“어무이. / 지는 윗마를 방앗간네 / 삼돌이가 좋심네. / 가랑 들이서 아이 낳고 / 도란도란 살갑니더 / 나중에 / 조선에 가면 소학교 가서 / 글도 배울 겁니더. / 어무이도 자주 찾아뵈옵 겁니더. / 나중에 / 이 전쟁이 끝나면 / 이 쪽방에서 나가면 / 이 부대가 떠나면 말이지예. / 나중에 말이니더. / 근데 / 어무이 또 한 놈이 오네예 / 이번엔 높은 농민가게”(어느 위안부 소녀의 일기)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짓말만 / 되풀이하는 일본에게 /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왜? 아직 끝나지 않은 / 전쟁이 어디선가 지금도 /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중에서)

고 공점엽 할머니를 서거 전달 받고 쓴 시와 고 광예남 할머니를 한 달에 두 번씩 찾아뵈면서 쓴 시들도 있다.

2부는 할머니 31명의 증언이 하나씩 담긴 시들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각국의 일본 전범 피해자들을 20년 넘게 취재해 온 이토 다카시 씨가 세상에 알린 남한·북한·중국 위안부 피해자 증언들이다.

“일본 장교 높은 위안부들을 모아놓고 ‘텐도 헤이까(천황 폐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하루에 30~40명, 일요일에는 40~50여 명을 상대할 것을 강요하였다.” (김덕순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추의 한을 갚아. 내가 어떻게 해야 ... 이 천추의 한을 ... 나는 사죄받아야 해. 배상받아야 해. 윤 할머니는 마이크를 부여잡고도 몸을 바르르 땀다.” (윤수만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 중에서)

조현옥 시인은 시집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다. “한 페이지의 훌륭한 역사는 천 페이지의 시보다 낫다. ...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한 뒤 문제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약속하면서 들어섰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생존자는 이제 17분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여러 논란을 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생긴 독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 일독을 권한다. 아쉽게도 절판됐지만 온라인 중고 서점 등에서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여해 볼 수 있다.

김승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7월 3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물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파들이 내놓았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를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노동조합 민주주의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형식 논리일 뿐이다.

민주노총 중집(6월 29일과 30일)이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했는데도 김명환 위원장은 합의 강행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7월 1일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 참석을 예정해 놓았다. 이를 보면 김 위원장의 관심사는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사정 합의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김 위원장은 협약식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의 노사정 잠정 합의안 반대를 우회하는 수단에 불과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물론이고, 노사정 합의 시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며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내용을 전혀 실질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중집위원 반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 성원 다수는 7월 2일 중집 회의 직후 성명을 내어 노사정 잠정 합의안 폐기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를 요구했다.

이 성명서 발표에 부위원장 8명 중 6명이 참여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부위원장만이 불참했다.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규모가 큰 가맹노조(위원장)들이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화학섬유연맹과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도 참여했다. [7월 8일 현재 건설산업연맹이 빠지고 전국교수노조와 여성연맹이 추가됐다.] 지역본부의 경우 16개 지역본부장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잠정 합의안 반대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이 들고 온 합의문에는 해고를 막고,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문턱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그림, 경총이 원하는 내용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합의할 수 없는 합의안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김명환 위원장의 독단적·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지난 교섭 과정은 중집의 결정을 번번이 어기고, 김명환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독단적, 일방적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수단

중집 성원 다수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 폐기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철회를 요구한 것은 완전히 옳은 일이다. 동시에 중집 성원들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도 사용해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고 위기에 내던져진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즉각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더욱이 서명에 참여한 가맹노조들은 투쟁 역량이 충

분한 조직들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중집 성원들의 성명은 비효과적인 반대로 끝날 수 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려 할 것이다. 효과적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또한 대의원들은 합의 무산을 비난하는 모든 주류 언론의 못매 속에 위축돼 투표하도록 내몰릴 수도 있다.

중집 성원 다수는 성명에서 “조직적 혼란과 분열을 빠르게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대회 무산과 그에 따른 노사정 합의 무산만으로는 사용자들의 공격과 정부의 배신 행진을 멈출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들과 여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킬 수도 없다. **대화에 기대를 걸어온 집행부의 방침을 180도 뒤집는 조치로서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이끌 때만 진정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다.**

다수 중집 성원들은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현실적 세력균형으로 보건대 바로 노조·연맹 위원장들 자신이 현장에서 의 파업을 소명해야 한다. 하반기로 미루지 말고.

관련 기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329호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쟁점, 전망, 대안** 328호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 합의안 해설 비판** 330호

★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안 비판** 327호

추천 책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쓰고 엮음 | 책갈피 | 228쪽, 12,000원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정부

장호중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속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활동 재개를 이유로 별 대책도 없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세계적 수준에서 2차 확산기를 맞은 여파가 크다.

한 조사를 보면,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는 인구의 47퍼센트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명 높은 ‘집단면역’에 한걸음 다가선 셈인데, 거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뜻이다. 뉴욕주의 확진자 수는 42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3만 2267명에 달한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보듯 트럼프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별 것 아니라는 반년 전의 입장으로 돌아갔다. 적어도 방역에 관

한 한 자포자기한 게 분명하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늘었다가 줄어듦을 반복하고 있다. 7월 초 연속해서 확진자 수가 60명을 넘는 날이 3일간 지속되다가 7월 7일 현재 확진자 수는 44명으로 조금 감소했다. 세계적 확산 여파 때문에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 늘었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확산 속도는 ‘아직은’ 통제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통제 능력이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환자 수용 능력이 취약한 것이 가장 문제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20일 기준으로 확진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음압병상이 일반환자의 경우 634개, 중환자의 경

우 115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애당초 음압병상의 수가 매우 적은 데다 입원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이 병상 포화 상태에 근접하자 정부는 퇴원 기준을 완화해 입원환자수를 줄였다. 6월 17일 67.4퍼센트에 이르던 서울시의 코로나19 환자 병상가동율은 7월 2일 36.2퍼센트까지 떨어졌다.

3월 대구·경북에서 환자들이 입원할 병원이 없어 집이나 길에서 사망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퇴원 기준 완화가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면 이 조치는 약수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메르스는 감염 2주 뒤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아진다. 애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코로나의 공기 감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바이러스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감염

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GH형으로 알려진 새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6배나 강하다고 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우 퇴원 기준 완화 조치가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광주에서는 병상이 포화돼 전라남도 내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고 전라남도도 병상이 충분치 않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어나고 감염 경로가 복잡해지는 것도 대량 확산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공공병원과 의료 물자, 숙련된 공공 의료 인력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시급하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이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가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7월 7일 전남의 60대 일용직 노동자는 100만 원 빚을 갚아야 해서, 자가격리를 어기고 일감을 찾아나섰다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됐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격리된 노동자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같은 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오자 언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아니라 이윤 감소라는 것을 보여 준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사코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